

## 직장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여성의 출산후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선 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1, e-mail : youngkk@kwidimail.re.kr

### 요 약

사업자에게 영유아가 있는 여성의 숙련노동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직장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것에 대해 조세혜택 부여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6조 제2항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평등권) 및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여성의 경우 현실적으로 출산 및 육아의 부담 때문에 취업 중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열악한 육아여건에 기인함
- ☐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과 관련하여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출산 이후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직장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을 위한 비용은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에 비해 지출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충분한 조세혜택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에 대한 조세혜택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세혜택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동(同)시설을 신축·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직장보육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7/100에서 10/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세액공제액 = ①+②+③

- 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20% (중소기업은 30%)
- ②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중소기업은 30%)
-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①·②를 선택하지 않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MAX(④, ⑤)
- ④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소급 4년간 발생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 40% (중소기업은 50%)
- 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공제율<sup>2)</sup> (중소기업은 25%)

※ <표>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에 비해 훨씬 사업관련성이 크고 지출의 우선순위도 높은 연구·개발활동의 경우 시설투자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일반적인 지출액만 고려하더라도 지출액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직장보육시설은 취득금액, 특히 동(同)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매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로 허용하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지출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공제율 = MIN(3%+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수입금액)×50%, 6%)

□ 조세감면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 적용의 배제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양한 조세감면이 적용되어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감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있어(조특법 제132조), 직장보육시설의 취득금액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음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동(同)세액공제 전액과 대기업의 동(同)세액공제 중 내국인의 석·박사 인건비분 세액공제액 등과 같이 과세관청이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일부 조세감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어 제한 없이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직장보육시설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동(同)시설을 신축·구입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세액공제 대상 지출범위에 토지매입금액 포함

- 현행 제도는 직장보육시설의 신축·구입을 위한 지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투자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토지의 매입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에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토지를 임대한 후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sup>3)</sup>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함

---

3) 실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골프장의 개발지(코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임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즉 동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 정의 규정의 개정
  -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정의한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해석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해당 기업에서 동(同)시설의 신축·구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sup>4)</sup>
  -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정의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또는 단순히 “취학전 아동”으로 개정하도록 함

### 3. 정책효과

-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중단 완화
- 출산후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충실하게 실현
-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고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여건의 조성에도 기여

---

4)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동(同)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법률해석 여부에 따라서 동(同)세액공제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특정 시설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6세 이상의 취학전 아동을 동시에 보육하는 경우 동(同)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 보육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영유아만을 보육하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은 아직 없지만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의하면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전자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세액공제를 기대하고 시설을 신축·구입한 사업자가 이후 동(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 정의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법령해석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유사 법령간의 개념정의 조화<sup>5)</sup>

- 
-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5)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자녀양육공제의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4호).